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62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0. 8.

발 의 자 : 서범수 · 김위상 · 한지아
이달희 · 이인선 · 조은희
박성민 · 김상욱 · 고동진
이헌승 · 장동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

「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은 성착취 뿐만 아니라, 노동력 착취, 장기적출 등 다양한 착취(범죄)를 포괄하고 있어 여성가족부가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법 소관부처를 여성가족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관계 부처 간 조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, 인신매매 피해 최초 인지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현장 대응 강화 및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·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.

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인신매매방지 정책의 협의·조정기구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이 되어 신속한 관계

부처 간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고, 경찰청은 5년 단위 정부의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설치·운영, 현장출동 및 조사 후 피해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정책실무를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하고,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도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경찰청에서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·운영하게 됨을 고려하여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한 시·도경찰청장이 시·도경찰청에 설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경찰청장은 5년마다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함(안 제8조).
- 나.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를 인신매매 등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관계부처와 신속한 정책 협의·조정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9조).
- 다. 경찰청장은 5년마다 국내외 인신매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- 라. 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여야 함(안 제13조).

조).

마.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신고의무자는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경찰청장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사례판정위원회를 두어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(안 제14조).

바. 경찰청장은 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(안 제15조제1항).

사. 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임무에 인신매매등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,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,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을 추가함(안 제15조).

아. 시·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·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시·도경찰청에 둔다(안 제15조 제2항).

자. 경찰청장은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함(안 제27조).

차. 경찰청장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국립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(안 제29조).

카. 경찰청장은 3년마다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

가하고,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(안 제38조).

타. 경찰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(안 제45조).

파. 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그 권한의 일부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안 제47조).

하. 법 소관 부처 변경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령을 여성가족부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함(안 제10조, 제15조, 제33조, 제34조, 제38조).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각각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제9호”를 “제2항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한다.

1. 교육부차관
2. 법무부차관
3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4. 보건복지부차관

5. 고용노동부차관

6. 여성가족부차관

7. 해양수산부차관

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각각 “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성가족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각각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5조”를 “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, 같은 조 제2항”으로, “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판정위원회”라고 한다)를”을 “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각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판정위원회”를 “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와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”를 “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또는 지역인신

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, “제15조”를 “제15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, “위하여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”를 “위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여성가족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, “예방·방지”를 “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”으로 한다.

7.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

8.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
9.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

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피해자를”을 “시·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”로,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”를 “시·도경찰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”를 “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여성가족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”을 “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은”으

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”을 “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각각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4항제1호 단서, 같은 항 제2호 단서,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“여성가족부령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“여성가족부령”을 각각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여성가족부령”을 “행정안전부령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각각 “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,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경찰청장, 시·도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경찰청장”으로, “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”을 “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3항 중 “여성가족부장관”을 “시·도경찰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계획은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사업계획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 추진실적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(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 교육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한 기관이 제출한 교육결과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 실적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.

제7조(중앙·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판정 및 피해자 확인서 등에 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및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사항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및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피해자 확인서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한 사항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

권익보호기관이 수행하는 사업과 권리·의무는 제15조제1항의 개정
규정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승계한 것으로
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등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는 이 법에 따라 보호·지원을 받는다. 1.·2. (생략) 3.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(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으로서 제14조에 따라 <u>여성가족부장관</u> 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② (생략)	제3조(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찰청장</u>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) ① <u>여성가족부장관</u>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인신매매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제8조(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) ① <u>경찰청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“정책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 4. (생략)

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법무부장관

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
3. 보건복지부장관

4. 고용노동부장관

5. 해양수산부장관

6. 경찰청장

<신설>

7. (생략)

<신설>

8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9. (생략)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행정안전부장관-----

경찰청장-----

-----.

1. 교육부차관

2. 법무부차관

3. 문화체육관광부차관

4. 보건복지부차관

5. 고용노동부차관

6. 여성가족부차관

7. 해양수산부차관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9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.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.

<삭제>

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

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위촉된
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
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
되, 여성가족부 소속 고위공무
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⑤ (생략)

제10조(인신매매등 실태조사) ①
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국
내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를 실
시하여 인신매매등 실태에 관한
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, 이를
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및 피
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정책수
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
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
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
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
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
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
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
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

③ 제2항제10호-----

-----.

④ -----
---행정안전부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인신매매등 실태조사) ①
경찰청장-----

-----.

② 경찰청장-----

-----.

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인신매매등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교육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3조(피해자식별지표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(이하 “피해자식별지표”라 한다)를 개발하여 고시하고, 검사, 사법경찰관리, 출입국관리공무원,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여야 한다.

-----.

③ -----

-----행정안전부령-----.

제11조(교육 등) ① -----

-----경찰청장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피해자식별지표 등) ① 경찰청장-----

-----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피해자식별지표의 활용을 권고받은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활용 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피해자 확인서 발급) ①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무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·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 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판정위원회”라고 한다)를 둔다.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경찰청장
-----.

제14조(피해자 확인서 발급) ① -----

-----경찰청장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제15조
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, 같은 조 제2항-----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각각-----
---. -----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와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-----.

③ 경찰청장은 중앙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또는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-----
-----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15조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확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「출입국관리법」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5조(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·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.

1. ~ 6. (생략)

7.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

<신설>

<신설>

④ 경찰청장-----
-----제15조제1항-----
-----.

⑤ 경찰청장-----

-----.

제15조(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) ① 경찰청장-----

-----위
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경찰청에 둔다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

8.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

9.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
의 운영

8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
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·방
지 관련 업무

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·보호
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
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
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
익보호기관을 특별시·광역시
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
도에 둔다.

1. ~ 3. (생략)

4.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
운영

5.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
정하는 인신매매등 예방·방
지 관련 업무

③ (생략)

④ 여성가족부장관, 특별시장·
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
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
·도지사”라 한다)는 「공공기
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
매등 예방·방지를 목적으로 하
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
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

10. -----행정안전부령---
-----예방·방
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---

② 시·도경찰청장은 피해자를

-----시·도경찰청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
회---

5. -----행정안전부령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경찰청장 및 시·도경찰청장
은 -----

할 수 있다.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27조(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) ① (생략)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「법률구조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29조(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)

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립·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의료기관”이라 한다)으로

-----경찰청장 및

시·도경찰청장은 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경찰청장-----

-----.

③ 경찰청장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)

① 경찰청장 -----

지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33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지원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지원시설: 1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2. 장애인지원시설: 2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3. 아동·청소년지원시설: 19세가 될 때까지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4. (생략)

5.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: 2년 이내. 다만,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-----.
-- 행정안전부령-----

-----.

2. -----.
--- 행정안전부령-----

--.

3. -----
-----.
----- 행정안전부령-----

-----.

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
---. ----- 행정안전부령-----
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지원시설의 업무) ① 일반
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
를 수행한다.

1. ~ 10. (생략)

11.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
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
정하는 업무

② ~ ④ (생략)

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은 다
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그 밖에 사회 적응을 위하여
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가족
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제38조(지원시설 등의 평가) ①
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
원시설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
고,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
에 반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
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여성
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원시
설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

제34조(지원시설의 업무) ① ----
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11. -----
----- 행정안전부령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행정안전
부령-----

제38조(지원시설 등의 평가) ①
경찰청장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행정
안전부령-----.

제45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경찰
청장-----

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여성가족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제33조 제6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4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0조(과태료) ①·② (생략)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경찰청장-----

-----.

제47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
-----경찰청장-----

-----시·도경찰청장, 시·도지사-----
-----.

② 경찰청장-----

-----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 권익보호기관-----
-----.

제50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

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여성가족부장관</u>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</p>	<p>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<u>시·도경찰청장</u>----- ----- ---.</p>
--	--